

## 코로나19 100일

# 안정기 진입했으나 확산 위험 요소 '여전'

확진자 8천여 명 쏟아진 대구·경북 진정되면서 소강 국면  
대구 청년처럼 기본 방역수칙 무시할 땐 2차 대유행 가능  
연내 치료제 개발 힘들 듯...생활방역 실천이 최선의 백신

오는 28일이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된다.

우리 국민이 숨찬 고비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3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최근 하루 신규확진자 10명 안팎으로 줄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첫 한 달 동안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2월 16일 30번째 확진자가 나오기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대체로 방역망이 잘 작동한 것이다. 무엇보다 3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동안 집단감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신천지교회 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여명이다.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구·경북 확진자(8천여명)의 75%에 달한다. 국내 사망자 대다수도 대

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경북에서는 신천지교회뿐 아니라 정신·요양병원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져 초기 사망자가 급증하는 요인이 됐다.

전국의 의료진이 대구·경북으로 가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경주했고, 정부도 대구·경북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쏟아부었다. 많은 국민들이 대구·경북의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대구·경북을 돕는 국민들의 성금도 쇄도했다.

마침내 대구·경북 상황이 진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명 안팎으로 급감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최근 또 대구지역 19세 청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부산지역 클럽과 주점을 잇따라 방문해 비상이 걸린 것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구 확진자 A(19)군은 지난 17~18일 부산을 방문했다. A군은 17일 SRT를 타고 오후 9시 20분 부산에 도착해 오후 11시 40분 부산진구 1970세마을포차를 방문했다. 18일 새벽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단됐던 보습설계사 등록 자격시험이 열린 26일 서울 명지전문대 운동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매월 8~9차례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손해보험협회는 매월 6~7회 지역을 순회하며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서울=김민수 기자

시에 서면 클럽 바이브에서 1시간 40분간 놀았다. 이어 숙박시설에서 잠을 잔 뒤, 18일 오후 4시 30분 서구 송도해변로 청춘 핫집에서 밥을 먹었으며, 승객이 많은 무궁화호를 타고 대구로 귀가했다.

A군이 부산을 방문한 시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으로 정부가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휴업을 권고했음에도 운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A군 역시 국내 코로나19 폭발 진원지인 대구 출신이지만 감염증 예방을 위

한 최소한의 규칙도 무시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으나 대구 청년처럼 돌발상황이 나올 경우 2차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 침방울로 쉽게 전파되고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특성상 언제든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제압할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도 문제다. 백신이 율해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

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버티려면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 방역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위험신호는 방심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일정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돼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야말로 최선의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서 기자

## “올해 첫 도입 ‘전남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기본형 공익직불제 통합...소농·면적 직불금으로 지급

전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으로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논할용직불금(논이모작)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0.5ha

이하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고소득자, 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면적과 농외소득, 농촌거주기간 등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면적 구간에 대해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을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실제로 2ha 이하의 진흥지역 논·밭은

205만원을 지급하며, 비진흥지역 논은 178만원, 밭은 134만원이 지급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지로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다.

농지 전용과 불합 입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이며, 농촌의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직불금을 받으려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

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처벌도 강화한다.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고 최대 5년간 등록을 제한하며, 직불금 부정 수령 시에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관측심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상자는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마일별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성은 기자



# 함평천지농·특산품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